

광주·전남 사회복지시설 ‘낙제점’… A등급 절반에 불과

복지부 평가, 재정·조직운영 미흡 3곳은 최하위 F등급

등급 낮은 시설 ‘서비스 품질관리단’ 통해 컨설팅 지원

광주·전남지역의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A등급(90점 이상)을 받은 곳은 딱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약포장재사업소·여수시장 애인보호작업장·함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중 유일하게 F등급(60점 미만)을 받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광주·전남 아동복지시설(34곳)과 장애인거주시설(24곳)·장애인직업재활시설(24곳) 등 사회복지시설 82곳을 대상으로 한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아동복지시설(275곳), 장애인거주시설(367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372곳) 등 1014곳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관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결과를 보면,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은 곳은 50%인 41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등급(80~90점 미만)을 받은 시설은 25곳(30.4%) ▲C등급(70~80점 미만) 10곳(12.2%) ▲D등급(60점~70점 미만) 3곳(3.7%)이었다. D등급을 받은 시설은 광주 보람의 집·전남 광명자립작업장·전남 소망자립센터다. 최하 등급인 F등급(60점 미만)을 받은 곳도 48곳(4.7%)에 달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일하게 F등급을 받은 3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동약포장재사업소와 함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6개 영역 중 시설·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영역에서 F등급을 받았다.

시설·환경영역도 각각 B등급(함평

군장애인보호작업장)·C등급(동약포장재사업소)을 받은 것에 그쳤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선 전남지역의 A·B등급 비율이 광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비교한 결과, 전남은 A·B등급을 받은 곳이 45곳 중 38곳(84.4%)에 달했으며, 광주는 37곳 중 28곳(75.7%)에 불과했다.

D등급 또는 F등급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관계당국이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챙겨본 뒤 해당 시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완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첫 평가를 받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설운영 노하우 등이 부족해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D등급 또는 F등급 등 낮은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품질관리단’을 통해

■ 2013년 광주·전남 사회복지시설 평가	
A등급 (90점 이상)	41곳 (50%)
B등급 (80~90점 미만)	25곳 (30.4%)
C등급 (70~80점 미만)	10곳 (12.2%)
D등급 (60~70점 미만)	3곳 (3.7%)
F등급 (60점 미만)	3곳 (3.7%)
C등급: 광주일택원, 여수보육원, 함평산애원, 실로임재활원,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보호작업장, 광주근로시설, 광주북구장애인작업장센터, 귀일행기일곡터, 인화원 보호작업장, 함북재활원보호작업장	
D등급: 보람의 집, 광명자립작업장, 소망자립센터	
F등급: 동약포장재사업소, 여수시장애인보호작업장, 함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	
※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82곳 대상	
(보건복지부 제공)	

해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1014곳 사회복지시설 중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곳은 449곳(44.3%)에 그쳤다. 이어 ▲B등급 346곳(34.1%) ▲C등급 113곳(11.1%) ▲D등급 58곳(5.7%) ▲F등급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중 최우수인 A등급을 받은 시설은 50%에 불과했다. 사진은 기사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48곳(4.7%) 등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의뢰해 사회

복지시설을 11개 시설유형으로 나눠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노인양로시설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2011년에는 정신요양시설과 노숙인복지시설을 평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북구, 복지 사각지대 없애기 총력

‘발굴 추진단’ 연중 상시 운영… 취약계층 적극 보호

광주시 북구(구청장 송광운)는 18일 북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세대 발굴을 위한 ‘북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7일 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했다.

구는 ‘복지 사각지대 ZERO화’를 선포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 및 지원 연계, 관리 ▲자살예방 등 3대 실천과제를 목표로 모든 행정력과 인적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는 이를 위해 동네 구석구석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부소환단과 통장, 부녀회 등과 연계해 위기가정을 발굴한 뒤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 파출소와 지구대, 119

소방안전센터와 연계해 상시 응급사태에 대비함은 물론 우편집배민 및 방문간호사 등 방문서비스 인력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연중 상시 발굴·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Zero화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복지 1번지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인 2만500명이며, 복지급여대상자도 18만3000명으로 광주시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요양병원, 휠체어 이동공간 확보 의무화

충간경사로 등 4월부터 시행…기존 요양병원 1년 유예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은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휠체어와 병상 이동이 가능한 공간과 복도를 확보하며, 충간 경사로를 마련해야 한다.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 환자의 입원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 시설기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병원협회·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해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벽면과 벽면 사이의 치수(유효 폭)는 1.2m 이상 되도록 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폭 1.2m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의 충간 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 바닥의 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와 비상연락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기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연합뉴스

복지공무원 늘린다… 3년간 7000명 충원

일반행정직 통합 검토… 찾아가는 서비스 지향

정부가 복지공무원을 충원하고 공무원 채용 시 사회복지 분야를 일반행정직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태부족은 이들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이어져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까지 복지공무원을 7000명 늘리고 향후 3년간 추가로 충원키로 했다.

또 일반직 행정 공무원을 뽑을 때 지금처럼 사회복지 공무원을 따로 뽑는 대신 일반행정직 시험 과목에 사회복지 분야를 넣면서 사회복지직을 일반행정직과 통합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복지공무원의 충원을 서두르고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 직렬을 통합해 복지 현장에 더 많은 보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수는 2007년 211.8명에서 2012년 492.1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1인당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각종 복지정책을 부지기수로 쏟아낸 데 반해 인력 충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에서 파생되는 각종 업무는 최하위 행정조직인 동주민센

터 등의 말단 직원들로 집중된다.

소위 ‘깎배기’ 구조다.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부터 보육비 지급, 무료급식 신청까지 기존에 다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하던 업무까지 ‘복지’란 이름이 붙으면 모두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떠넘겨져 업무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넓힌다. 최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송과 세모녀 자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이웃들의 베풀기 선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척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복지공무원을 충원에 국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29P - 10/12/13층, 3세대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9/13층, 2세대, 전체 올수리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1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천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공동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권리분석 등 정보 제공